

“노동자·민중이 윤석열 정권 심판 나설 때다”

노조법 개정·화물연대 승리·윤석열 심판 노동자대회 ... “노조법 개정, 불평등 해소·사회 정의 실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노동자 1만여 명이 노조법 2·3조 개정 쟁취와 화물연대 파업투쟁 지지·사수 결의를 모았다.

민주노총이 12월 3일 오후 서울 국회 앞과 부산 신항에서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노동자



총파업 승리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화물연대 파업 연대·승리를 위해 주요 거점 중 하나인 부산 신항에서 대회를 동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박희은 총연맹 부위원장,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태청지회 유최안, 강인석 부지회장, 이김춘택 사무장과 유성욱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12월 5일로 엿새째 노조법 2·3 개정 쟁취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민주노총과 노동자의 요구는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목숨 걸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만들고, 노동조합 할 권리를 보장하고, 진짜 사장 원청과 교섭하고, 손해배

상 폭탄으로 노동3권을 박탈해 노동자를 죽이지 말고, 민영화로 민중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투쟁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11월 29일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화물노동자 계엄령을 선포했고, 12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조가 사업자단체라며 조사를 나왔다”라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 화물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동조합이다. 조사를 당당히 거부한다. 죽이려면 죽여라. 어차피 이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분노를 토했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태청지회 사무장은 투쟁사를 통해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이 커다란 사회 반향을 일으켰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기회를 우리에게 줬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며 “법 개정을 극렬히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욕하기 전에, 법 개정 앞에 주춤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속 끊이기 전에 민주노총 전 조직이 노조법 2·3조 개정에도 든 것을 던져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은 ‘이대로 살 수 없다, 윤석열 정권 심판 전국 민중대회’에서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이 노동자를 대표해 노조법 개정 등 개혁 입법 쟁취 관련 투쟁사에 나섰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법, 손배 폭탄 금지법을 연내에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대회를 마친 노동자·농민·시민들은 노조법 개정 등 개혁 입법을 가로막고 윤석열 꼭두각시 노릇만 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항의 행동을 벌였다.

법원, “현대제철 전체 공정 불법파견 사용”

충남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7년 만에 승소 ... 지회, 정규직 전환 특별 교섭 요구

법원이 7년 만에 현대제철이 당진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고 판결했다. 지회는 2016년 1월 소송을 시작했다.

인천지방법원은 12월 1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1·2차 소송 원고 노동자 923명에 대해 승소 판결을 했다. 두 노동자는 정년이 지났으며 기각했다.

법원은 아홉 명은 현대제철 근로자지위를 확인하는 고용의제로 판결하고, 914명에게 현대제철이 고용의사를 표시하라는 고용의무를 판결했다. 법원은 2021년 2월 노동부가 당진 비정규직 749명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때 제외한 구내운송 등 공정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에 정규직 전환 특별교섭을 공식 요청한다” 라면서 “현대제철은 판결과 시정명령대로 정규직 전환을 이행해야 한다. 지회는 원청의 억압과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으로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이상규 지회장은 “현대제철 불법파견 은폐 자회사 핏수로 5,300명 중 3,5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소송을 포기해야 했다” 라며 “현대제철은 판결에 따라 소모적인 논쟁과 다툼을 끝내야 한다” 라고 촉구했다.

송영섭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당



진 비정규 노동자가 일하는 압연·냉연·제강·재선·연주·크레인·기계정비·전기정비·연료-부연료 구내운송 등 전체 공정의 불법파견을 따진 소송이었다” 라면서 “법원은 원청이 모든 공정의 작업지시를 전자시스템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을 이용해 실시

간·구체·개별적으로 했고,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라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송영섭 변호사는 “3차, 4차, 5차·임금 청구 소송도 오늘 선고 소송과 다르지 않다” 라며 “사법부는 같은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재판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구체해야 한다” 라고 호소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1차 집단소송 중인 157명은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2·3차 소송 중인 노동자 257명은 지난 7월 21일 6년 만에 1심 승소했다.

대법원은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2011년 5월 3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1차 근로자지위확인 소를 제기한 지 11년 2개월 만인 7월 28일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는 포스코 노동자라고 최종 판결했다.

판결 당시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대법원이 포스코는 일관제철소로서 연속 공정이라고 봤다. ▲법원은 하청과 정규직 생산공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정규직들의 작업에 영향을 미쳐 라인이 중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청업체 명의 작업표준서가 있어도 포스코의 개입이 있었다면 독자 작업 지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포스코가 하청업체와 공유하는 생산관리시스템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Shop Floor)은 하청업체가 수정할 수 없는 원청의 구속력이 있는 지휘명령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 등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범죄자 정의선 구속·정규직 전환, 해 넘기지 말라”

불법파견 범죄집단 현대차 규탄 대회 ... “판결 기대지 말고 투쟁으로 해결하자”

금속노조 사내하청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재벌·대기업의 불법파견 범죄를 새해까지 끝지 말고 처벌하자”, “투쟁으로 범죄자 정의선을 반드시 구속하자”라며 투쟁 결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는 12월 1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불법파견 범죄집단 현대자동차그룹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동자들은 본대회에 앞서 서울 양재역 네거리에서 출발해 현대차그룹 본사까지 거리 행진을 하며, 현대차그룹이 자행하는 불법파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받는 차별 등을 시민들에게 고발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의선은 불법파견 노동자를 고용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자본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처벌받지 않고 있다”라면서 “금속노동자가 투쟁하고, 하청노동자가 단결해야 바뀐다”라고 강조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법원 판결에 기대지 말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현대제철 등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 동지들이 금속노조

깃발 아래 단결해서 투쟁할 때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독려했다. 윤장혁 위원장 11월 30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조선헌청지회 간부들과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김광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전주 비정규직지회장은 투쟁사에서 “지난 10월 27일 다시 대법원이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을 했다. 최초의 대규모 집단 판결이다”라며 “대법원 최초 판결 이후 12년을 버티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은 길었고, 현대자동차의 죄는 무거워졌다”라고 꼬집었다.

김광수 지회장은 “대법 판결 이후 현대차와 본협이 두 번, 실무 협의를 여섯 번 했지만, 한결같이 ‘사죄할 수 없다, 열사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없다, 정규직 논의할 수 없다’라는 똑같은 얘기를 한다”라면서 “강고한 투쟁으로 말이 안 통하는 현대차의 꼬리를 내리게 할 것이

다”라고 경고했다. 현대차그룹은 법원 판단이 나오면 소송 인원과 상관없이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10월 27일 현대·기아자동차 420명에 대한 대규모 불법파견 대법원판결 이후 약속을 뒤집었다.

신성원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화성 비정규직지회장은 “불법파견 투쟁과정에서 우리는 구속당했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다. 정의선 사과로 부족하다. 구속하고, 현대차를 처벌해야 한다”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와 땀을 돈으로 바꿔 가져간 현대차는 대법원판결을 이행해 노동자에게 돌려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회에서 현대그린푸드지회와 현대자동차판매연대지회,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등이 함께 현대자동차그룹의 불법파견을 규탄하고, 책임자 정의선 회장 구속과 불법파견 범죄 사과를 촉구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금속노조 불법파견 사업장 대표자들은 ‘불법파견’을 상징하는 팻말을 부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대법원 앞으로 이동해 빠른 판결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이어갔다.